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노동개혁의 방향과 과제

[발제자] 이승길 한선재단 고용노동정책연구회장

[일 시] 2022년 11월 17일(목) 오전 9시 30분

[장 소] Google Meet 온라인 세미나



☒ 문자 후원

#7079-4545

제413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 한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전반에 걸쳐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화에 부응한 개혁을 요구받고 있다. 정권은 교체되었지만 아직 본격적인 개혁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개혁의 방향은 제도의 정합성과 정통성을 살피 전체 사회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기술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혁신과 고용의 창출과의 연계도 필요하다.

- 노동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다. 노동개혁 없이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선 시급한 과제인 근로시간제의 합리적 조정,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노사의 대등관계를 통한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고 중장년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연금제도와 정년연장의 연계도 모색되어야 한다.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 ◆ 세계경제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다. 미-중의 세계질서 재편과정에서 나타난 경제와 기술경쟁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유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은 세계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경제는 글로벌 복합위기와 저성장 추세로 경제는 침체되고 대대적인 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 ◆ 한국은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전반에 걸쳐서 패러다임 전환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변화에 부응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요구받고 있지만 현실은 오히려 다수의석을 가진 야당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3고 현상 극복과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이해관계자들의 이해상충으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우리에게 자강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지금 복합적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 ◆ 개혁과제에서 시급한 것이 노동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의 국제경쟁력(2019년 기준)은 141국가 중 13위이다. 하지만 노동 분야만 따로 보면 최하위이다. 노동시장 부문별 순위를 보면 정리해고 비용은 116위, 고용 및 해고 관행은 102위, 노사관계 협력은 113위이다. 후진국 노사관계 및 노조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는 복잡적이고 다양하지만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다반사로 행해지고 있는 불법쟁의행위이다.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불법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그리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노사안정과 노조의 자기책임원칙을 구현하는 방법이다.

◆ 시대전환과정에서의 과제들

- ◆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정권·세력·체제가 교체되었다고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이고 사법부는 아직 그대로다. 언론과 시민사회 등 사회세력의 변화도 감지되지 않는다. ‘새 판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정합성과 정통성

을 살피 전체 사회시스템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기술변화에 따른 시스템 혁신으로 고용창출을 유발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규제 개혁’이다. 생산성 향상과 투자유인을 위해 규제를 혁파하여 경제성장 기반을 다져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규제입법을 양산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자유 신장과 기업 활동을 북돋는 기업환경을 조성해야한다.

◆ 새 정부 개혁과제 및 노동정책 방향

- ◆ 새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다지기 위해 저성장 극복과 지속성장을 경제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우선 과제로 공공/연금 개혁, 노동시장개혁, 교육개혁, 금융개혁, 서비스 산업 부문의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이런 개혁을 통하여 경제의 기초체력 및 체질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 ◆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경제는 침체하고 있는데 노조는 더욱 투쟁적이다. 이 영향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다. 2020년 기준으로 노조조직률과 전체 조합원수 모두 증가했다. 시대전환기 과정에서의 산업구조 변화에 기인한 내부 불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조합원 수 증가에 기여했다.
- ◆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근로시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의 전환과 이의 확산을 비롯하여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 ◆ 윤석열 정부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근로시간의 유연화 및 임금체계 개편, 노사대등관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 규범과 관행을 혁신하고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며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자율예방체계 구축을 강화하는 로드맵도 마련하고 있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노동시장 개혁과 추진

- ◆ 개혁은 실현가능해야 한다. 이런 방향에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의 유연화, 노동시장법제에서 자기결정권 확대, 사회안전망과 직업훈련의 디지털화 등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민간주도의 활력을 높이려면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하여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안정화를 이루어야 한다. 특히 고령화·저출산에 대비하고 중장년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연금제도와 정년연장의 연계 그리고 생애주기에 부응한 평생직업교육·훈련시스템 구축이

따라야 한다. 노동운동의 방향과 방법도 바뀌어야 한다. 먼저, 노사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 한편 헌법과 노동법이 정한 노동3권은 보장하되 정치적 파업 등 불법노동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불법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한 통 꼭~ 한선을 지지해주세요.

(한 통 2,000원)